

##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와 대응:

한국과 태국의 비교론적 함의\*

이 동 윤\*\* · 이 재 현\*\*\*

### I. 문제제기

20세기 말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개된 일련의 민주화과정은 세계적으로 확산된 민주주의의 ‘제3물결’(the third wave)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Huntington 1991). 1986년 필리핀을 필두로 시작된 동아시아의 민주화 물결은 1987년 한국의 민주화로 이어졌으며, 1987년 계엄령 해제로 시작된 대만의 점진적 민주화과정에 뒤이어 1992년 태국의 민주화와 더불어 1998년에는 인도네시아가 민주화에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이들 국가들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적 법·절차에 입각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반 시민들과 사회단체, 주요 정당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가 보장되었으며,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된 정치지도자의 선출

---

\* 이 논문은 2007년 10월 19일 태국 푸껫에서 개최된 제7차 한·태 정치학자회의에서 발표된 “Crisis of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and Thailand: Comparative Perspectives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논문을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후 연구원

과 함께 민주적 규범과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치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성공 이후 이들 국가들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헌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 개정과 민주적 제도개혁을 통해 자유롭고 경쟁적인 정치참여와 공정한 선거제도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들 국가들에서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적 법·절차에 입각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지도자의 선출과 정부 구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정치적 도전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는 과거 독재 정권으로부터 억눌려 왔던 일반 대중의 정치적 욕구가 민주화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정치과정에 집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불안이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민주주의 퇴보나 권위주의체제로의 회귀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수준의 ‘정치적 위기’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체제의 정착을 가름하는 중요한 실험무대로 작용하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과 태국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 주목하게 된다. 최근 들어 이들 두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크고 작은 정치적 도전과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그 정치적 대응과 결과 또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경제위기나 2004년 대통령 탄핵사태로 표출된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국민들의 정치적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였지만, 이것의 대응과 극복과정은 오히려 민주적으로 진일보한 정치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반면 1997년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신헌법 제정 등

민주주의 공고화에 박차를 가하던 태국은 2006년 초부터 심화된 정치적 도전과 혼란, 그리고 2006년 9월의 군부쿠데타 재발로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게 되었다. 물론 이들 두 국가는 서로 다른 정치구조와 경제수준,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대응 양식과 정치적 결과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위기’ 그 자체이며, 이것의 원인과 대응 방식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치적 결과를 양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 한국과 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치적 위기는 어떤 상황으로 표출되었는가? 이들 두 국가들에서 발생한 정치적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민주화 이후 당면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이들 두 국가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것은 비교론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점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태국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정치적 위기의 발생에 따른 이들 두 국가의 대응과 서로 다른 진행경로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하나의 시론적 연구로서 민주화 이후 이들 두 국가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에서 표출된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정향과 행태에 주목하여 정치적 위기의 발생 원인과 대응 양식, 그리고 그 결과론적 차이점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와 대응

‘민주주의’(democracy)에 관한 다원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것은 “일반 시민들에 의해 통치자가 그들의 통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가 경쟁과 협력을 통해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통치체제 그 자체”(Schmitter et al. 1993: 40)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을 ‘다두제’(polyarchy)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이것은 “정부 공직을 획득함에 있어서 폭력의 사용을 배제하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인 또는 조직화된 집단들 사이의 의미 있고 광범위한 ‘경쟁’이 보장되고, 지도자와 정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규칙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주요한 사회집단들이 배제되지 않을 만큼 포괄적인 수준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표현되고 조직화될 수 있는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Dahl 1971: 3-7)라고 논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는 “새롭게 형성된 민주주의체제가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며, 권위주의체제로의 회귀나 민주주의에 역행하려는 흐름을 방지하는 것”(Schedler 1998: 91)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위주의체제 붕괴와 더불어 새롭게 형성된 민주주의체제는 언제나 지속되고 자동적으로 공고화되는 것은 아니며,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Sørensen 1993: 40).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지니는 본원적 의미를 그 공고화과정과 연계하여 다시 한 번 고려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민주적 정치제도나 법 개정만으로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논의되는 ‘다두제’ 개념은 민주주의가 지니는 최소 개념일

뿐이며(Diamond 1996: 21; Baker 2001: 21-34), 보다 확장된 개념을 필요로 한다. 즉, 오늘날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민주주의 개념은 대부분 정치체제의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강조하는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에 치중되어 있으나, 이것은 단지 민주적 절차에 입각하여 시민들의 대표를 경쟁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는 일정한 제도적 형태일 뿐, 소수의 권익 보호나 사회적 관용,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등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들을 온전하게 신장시키기에는 아직도 충분치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Haynes 2001: 7).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 공고화와 연계된 민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그 선행조건인 민주적 정치제도와 더불어 그것의 실질적인 운용과 실천이 함께 요구되어진다. ‘제도적’(institutional) 혹은 ‘절차적’(procedural)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substantive) 민주주의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Blais et al. 1990: 251). 흔히 하나의 정치체제가 지니는 민주적 속성은 그 정치제도와 더불어 그것을 운용하는 정치행위자들의 정치행태 및 정향 등을 통해 함께 파악될 수 있는데, ‘제도적·절차적’이라는 것이 시민사회가 정치지도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가에 국한된 문제라면, ‘실질적’이라는 것은 이들 모든 정치행위자들이 정치과정에서 무엇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는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Linz et al. 1996: 14-33). 민주화 이후 새롭게 형성된 민주주의체제가 영속되지 못하고 퇴보하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치적 태도와 정향을 올바르게 배양하지 못한 채 정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정치적 위기는 근래 들어 그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비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개념을

통해 포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Zakaria 2003). 비자유적 민주주의는 정치체제 내에서 시민적 자유가 포괄적으로 허용되기는 하나, 이것이 중요한 국면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제한된 상태를 의미한다(Engberg et al. 2001: 40).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이행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그 국가의 정치구조와 정치적 정향은 자유주의적 요소들과 비자유주의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Zakaria 1997: 24; Carothers 2001), 이러한 정치체제 내에서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권리 분배의 불평등, 견제와 균형의 실패, 소수자의 정치적 권익 박탈, 정부의 낮은 책임성과 부패 현상 등이 만연되고,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면 민주주의의 퇴보나 권위주의체제로의 회귀를 유발하는 또 다른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Armony et al. 2005: 113-4).

민주화 이후 신생 민주주의체제가 당면하게 되는 정치적 어려움은 비단 과거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인 비민주적 요소들을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구조를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Huntington 1996: 6). 흔히 정치과정은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하나의 정치과정으로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가 지니는 정치적 태도나 정향 또한 안정과 변화를 촉발하는 주요한 변동요인이다(Pye 2000: 29).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특정한 목표를 지닌 정치행위자로서 국민들의 지지와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는 정치지도자의 전략적 선택과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민사회의 낮은 정치참여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과도한 개인주의 등은 성숙된 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협할 수 있다(Macedo 2000: 53). 신생 민주주의체제 내에서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가 그들이 새롭게 형성한 정치체제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체제는 정치적 도전과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Diamond 1996: 33).

우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정치지도자는 과거 권위주의체제 시기에 통용되던 ‘명령과 통제’의 리더십이 아니라 각각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중재와 조정’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부터 민주주의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Korten 1972: 151-2). 흔히 정치리더십 차원에서 민주화 이후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지도자 자신이 과거 권위주의의 유산인 ‘제왕적’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민주화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치리더십의 부재나 무능을 노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정치리더십에 대한 주요한 도전은 정치지도자가 이전의 권위주의체제와 달리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Pye 2002: 28), 이에 따라 과거 관행으로서 정치권력의 남용이나 정치과정에서 표출되는 리더십의 부재 및 무능, 그리고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권력의 측근에서 발생하는 부패 문제 등은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생 민주주의체제에 있어서 민주주의 공고화는 정치리더십과 더불어 그것에 반응하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태도와 정향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민주주의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 사이의 정치권력과 권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필요로 한다(Pye 2000: 30). 민주화 이후 당면하게 되는 시민사회의 주요한 문제점은 민주화과정을 이끌었던 시민사회의 주요한 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시민사회 내에 내재되었던 인종적·종교적 구분과 사회·경제적 편차에 따른 갈등이 정치적 불안요인으로 등장할 있다는 점이다(Diamond 1997: xxxi).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과정 속에 남아

있는 과거 권위주의체제 시기의 낡고 전통적인 정치문화와 정향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견제와 변화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정치과정에서 표출되는 민주적 관행과 시민의식의 부족, 과도한 이익 표출과 정치적 개입,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조직의 부재 혹은 허약성, 시민사회와 정당 사이의 유기적 관계 부족 등 시민사회 내부의 제반 문제점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 개념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공고화는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가 그들의 정치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가장 합당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념이 그들의 정치·사회적 생활 속에서 내면화되고 일상화되는 것이다(Diamond 1997: xvii).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나 시민사회의 정치적 자율성이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배태되어야 하며(Linz et al. 1996: 18), 이것은 곧 민주주의가 정치리더십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정치과정을 규율하는 유일한 ‘게임의 규칙’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질서와 정치적 안정은 다른 어떤 정치·경제적 요인들보다 우선하여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 변화나 성격에 따라 얼마든지 그 유형을 달리하여 존재하거나 획득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 모두 민주적 절차와 관행을 내면화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차원의 정치모델 정립을 필요로 한다.

### Ⅲ. 한국과 태국의 민주주의 이행: 정치리더십과 시민사회의 문제점

한국과 태국은 정치적 차원에서 헌정체제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



제로 구분되며, 서로 다른 정치구조와 정치문화를 지니고 있고, 경제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이들 국가들의 정치과정이 추진하여 온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공통적으로 민주적 정치질서의 확립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87년과 1992년에 각각 민주화에 성공한 이들 두 국가는 일차적으로 헌법 개정과 선거법·정당법 등 일련의 정치적 제도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경쟁적 선거제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의에 입각한 정치지도자를 선출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한 민간정부를 구성하였다. 민주화 이전 이들 국가들의 선거제도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비대칭적 역학관계 속에서 독재 권력의 유지를 위한 도구적 수단에 불과하였으나, 민주화 이후 이들 국가들은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치적 경쟁성을 강화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이행

<표 1> 한국과 태국의 자유지수 변화 (1985~2006)

연도	한 국			태 국			연도	한 국			태 국		
	PR	CL	St.	PR	CL	St.		PR	CL	St.	PR	CL	St.
1985	4	5	PF	3	4	PF	1996	2	2	F	3	3	PF
1986	4	5	PF	3	3	PF	1997	2	2	F	3	3	PF
1987	4	4	PF	3	3	PF	1998	2	2	F	2	3	F
1988	2	3	F	3	3	PF	1999	2	2	F	2	3	F
1989	2	3	F	2	3	F	2000	2	2	F	2	3	F
1990	2	3	F	2	3	F	2001	2	2	F	2	3	F
1991	2	3	F	6	4	PF	2002	2	2	F	2	3	F
1992	2	3	F	3	4	PF	2003	2	2	F	2	3	F
1993	2	2	F	3	5	PF	2004	1	2	F	2	3	F
1994	2	2	F	3	5	PF	2005	1	2	F	3	3	PF
1995	2	2	F	3	4	PF	2006	1	2	F	7	4	NF

\* PL: Political Rights, CL: Civil Liberty, St.: Status, NF: Not Free, PF: Partly Free, F: Free 출처: Freedom House. <http://www.freedomhouse.org> (검색일: 2007.04.06).

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은 선거민주주의를 통해 어느 정도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의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의 제 조건들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에 기인하여 서로 다른 속도와 발전경로를 밟게 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정치적 권리(PR: 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L: Civil Liberties) 지표에 따른 자유지수를 확인한 결과,<sup>1)</sup> 한국의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가 추진되어 2006년까지 자유(F) 상태를 유지해 온 반면, 태국의 경우 1992년 민주화 이래 비교적 완만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1997년 신헌법 제정 이후에야 비로소 자유(F) 상태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4년 남부 지역의 폭력 사태에 대한 태국 정부의 강경진압이 추진된 이래 2006년 9월에는 군부쿠데타가 재발함으로써 태국의 자유지수는 다시금 부자유(NF) 상태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이 표출되었다.

한편 정치리더십 차원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에서 이들 두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보여준 정치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리더십은 흔히 ‘명령자’로서의 역할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내재된 필연적인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함성득 2002: 99).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의 과도기적 이행단계에 놓여 있던 노태우 대통령은 차지하더라도 3당 합당

1)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민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Polity IV’ 지수를 많이 참조하게 되지만, 이것의 경우 2004년까지의 결과만이 측정되어 2006년까지 변화된 정치적 변화의 내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한 김영삼 대통령은 초기 강력한 정치개혁으로 국민적 인기를 누렸으나, 아들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와 노동법 날치기 파동, 독단적 국정운영과 1997년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불행한 퇴임을 맞이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도 집권 초기 외환 위기의 효과적인 극복과 남북 정상회담 등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표출된 정치적 조정능력의 부재를 비롯하여 측근과 아들의 비리 문제에 기인하여 리더십의 급격한 약화를 경험하였다.<sup>2)</sup> 민주화 이후 집권한 정치지도자들 대부분은 과거 권위주의적 행태를 버리지 못한 채 민주주의에 대한 화려한 수사만으로 시간과 권력을 낭비하였으며, 퇴임 이후에도 측근과 친인척의 부패 문제에 기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정운재 2003: 476).

태국의 정치과정에 있어서 1992년 민주화운동은 개혁적 문민정치가 국민적 지지를 얻으며 전면에 등장하는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992년 9월의 민주선거를 통해 민주당(Democrat Party)의 추언(Chuan Leekpai) 총리가 집권하게 되자, 민주주의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크게 증대되었다. 그러나 여당 소속 의원들이 국유지 불하과정에 개입한 부패 스캔들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추언 총리를 비롯하여 민주화 이후 집권한 역대 총리들은 자신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부패 문제나 정책 부진 등을 이유로 퇴진하는 모습을 표출하였다. 1995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태국국가당(Chart Thai Party)의 반한(Banharn Silapa-archa) 총리는 본인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걸어 다니는 현금인출기’로 불리는 가운데 내각의 잦은 부패 스캔들과 정책 부진 등으로 인해 사임하였으며, 1996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새희망당

2) 정치리더십 차원에서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민주화 이후 집권한 노태우 대통령은 해야 할 것도 안 한 무단론자, 과거 청산에 주역인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치의 꿈을 이룬 국가경영의 실패자,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경영의 우등생이 되려다 좌절한 민족화해의 실천가로 평가되고 있다(김호진 2006: 442).

(New Aspiration Party)의 차왈릿(Chavalit Yongchaiyudh) 총리 또한 부패 문제와 1997년 외환위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었다. 차왈릿 정부에 뒤이어 다시 한 번 내각을 구성한 추언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성과가 미진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2001년 선거를 통해 태국애국당(Thai Rak Thai Party)의 탁싌(Thaksin Shinawatra) 총리에게 정치권력을 이양하게 되었으며, 탁싌 정부는 경제적 성과와 대중영합적 정책을 통해 2005년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는 야당을 비롯하여 언론과 지식인, 시민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양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치적 태도와 행태는 다소간 다른 양상을 표출하였다. 우선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1990년대부터 시민사회의 활동과 역량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특히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민단체는 ‘NGO 현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크게 활성화되어 정부나 의회조차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다(이동운 2007a: 174-5). 특히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르러 정부와 시민단체들 사이의 협력관계가 크게 증진되어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는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실감케 되었다. 또한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정치참여를 비롯하여 일부 시민조직이 선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였다(김의영 2004: 173).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투표와 정치참여, 언론의 자유, 정부 비판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나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치참여의 효능감에 대

해서도 기대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Kim 2002).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결국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대해 민주적 법·질서를 무시한 과격 시위나 저항운동을 펼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반면 태국의 경우 시민사회는 민주화 이전인 1980년대 준민주주의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민간 부문과 비정부기구들의 활동과 역할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표출하였다. 1992년 민주화 당시 군부세력의 퇴진과 민주주의체제 수립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태국의 시민단체들은 민주화 이후 정치·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태국의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중적 시민운동이기보다는 일부 지식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중심의 시민운동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higetomi 2002). 물론 농촌과 도시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을 연계하여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조직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빈자들의 연합(Assembly of the Poor) 등과 같은 조직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일부 지식인과 소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주창활동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그 구조적 취약성과 더불어 2001년 탁싌 정부의 출범 이래 정치적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제대로 된 역량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IV. 한국과 태국의 정치적 위기와 대응

민주화 이후 한국과 태국은 헌법 개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규적으로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가 실시되고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민주적 법·제도의 정착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한국과 태국은 예외 없이 민주주의의 흐름에 반하는 크고 작은 정치적 위기와 정치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경험하였다. 민주화 이후 발생한 정치지도자들의 권력 남용이나 정치리더십 부재, 정책적 무능과 부패 문제 등은 이른바 정치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저항과 시위, 탄핵과 군부쿠데타 등은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도전과 위기는 그 정도와 관계없이 민주적 정치제도와 질서가 현실의 정치과정 속에 자리 잡기 위한 실험무대이며, 민주적 법·질서와 관행이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 사이에 축적되기 위한 진통과정이라고 논의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새롭게 집권한 대통령들마다 정치리더십의 약화를 초래한 주된 원인은 부패 문제였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집권 초기마다 부패 척결의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대통령의 측근과 친족들에 의해 발생하는 끊임없는 부패 스캔들은 이들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권위주의 정부였던 전두환 정권의 연장선으로 간주되는 노태우 정부는 차치하더라도 김영삼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성역 없는 부패 척결’과 ‘위로 부터의 개혁’을 천명하였으나, 정권 말기에 부패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어 표출되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 역시 출범 초기부터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고 부정부패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공직 부패의 악순환은 쉽게 근절되지 못했다. 집권 초기부터 폭넓은 정치 개혁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던 노무현 정부조차 측근들과 공직사회의 부패 문제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특히 정권 말기에 쏟아진 측근들의 권력 남용과 수뢰 의혹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만들었다.<sup>3)</sup>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정치·경제적 위기를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극복하였으나,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여당과 야당 사이에 첨예화된 보혁갈등은 2004년 초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옴으로써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Hahm et al. 2005). 2003년 집권 초기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민주당을 탈당하여 자신의 추종세력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으며, 기존의 정치세력을 기득권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정치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를 편 가르는 공격적 언술과 일련의 ‘말실수’를 통해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와 무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회를 무시하는 그의 언술은 급기야 2004년 4월로 예정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의 발언이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3월에는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다.<sup>4)</sup>

민주화 이후 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 있어서도 부패 문제는 정치리더십의 약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5년 추언 총리의 의회 해산이나 1996년 반한 총리의 퇴진,

3)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조차 집권 초기부터 최도술, 안희정 등으로 이어지는 대통령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에 기인하여 정치적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조선일보 2004/10/31), 집권 말기까지 이광재, 여택수, 정운재, 전군표, 변양균 등으로 이어지는 부패 스캔들에 시달렸다.

4)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탄핵 저지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한나라당 129명, 민주당 53명, 자민련 8명, 기타 비교섭 단체 5명 등 195명의 의원들이 투표하여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271명의 3분의 2 이상인 181명이었다(조선일보 2004/03/12).

1997년 차왈릿 총리의 퇴진 모두 부패 문제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2006년 9월 발생한 군부쿠데타의 명분도 결국 탁싨 총리의 측근과 일가에 의한 부패 스캔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태국의 부패 문제는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오랜 정치적 관행이나 정치문화 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군부집권 시기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정경유착 관계나 1980년대 준민주주의(semi-democracy) 시기부터 확대된 기업인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그리고 후원자-추종자 관계(patron-client relation)를 통해 유지되어 온 태국 정당정치의 구조적 문제점과 매표(vote-buying) 행위에 필요한 막대한 선거자금 등도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Pasuk 1994).

다른 한편으로 1992년 민주화 이래 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정치적 위기는 2006년 9월 재발된 군부쿠데타였으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2001년부터 집권한 탁싨 총리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른바 ‘민주주의 논쟁’으로 불리는 탁싨 총리와 태국애국당 정부에 대한 비판은 모든 정치권력이 탁싨 총리 개인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탁싨화’(Thaksinization) 현상에 대한 비판과 탁싨 정부의 통치행태가 야당과 시민사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이라는 ‘민주적 권위주의’(democratic authoritarianism) 논쟁으로부터 가시화되었다(Thitinan 2003; Chookiat 2004; McCargo et al. 2005). 특히 2005년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재집권한 탁싨 총리와 태국애국당 정부의 일당지배가 가속화되자,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은 탁싨 총리의 독단적 통치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6년 초에는 탁싨 총리 일가의 비도덕적 세금 탈루 의혹이 공개되면서 탁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06년 4월 2일 실시된 조기 선거는 민주당과 대중당(Matichon Party) 등 주요 야당들이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 판결



이 내려짐으로써 탁신 총리에 대한 퇴진운동이 더욱 확산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19일에는 탁신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고 왕권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군부쿠데타가 재발함으로써 태국의 민주주의 논쟁은 심화가 아닌 퇴보로 결말을 맺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두 국가들에서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떤 형태로 표출되었는가? 우선 2004년 3월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한 한국 국민들의 태도는 탄핵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양분되어 표출되었으나, 극심한 정치적 동요나 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았다. 일부 국민들은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야당의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등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탄핵 철회를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거행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의사를 달리하는 찬반 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와중에도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각 단체들의 가두시위와 집회 또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다렸으며,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도 국정 운영의 중단이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은 2004년 4월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수가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지지함으로써 ‘탄핵 역풍’을 통한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였다.<sup>5)</sup> 2004년 3월부터 전개된 탄핵 정국은 오히려 민주화 이후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 정치문화를 측정하는 실험대가 되었으며, 그 결과 한국 정치는 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5)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총 의석수 299석 중 열린우리당이 152석, 한나라당이 121석, 민주노동당이 10석, 민주당이 9석, 자민련이 4석, 기타 3석을 획득하여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이 의석을 크게 잃은 반면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판명되었다.

한편 2006년 9월 군부쿠데타를 전후한 태국의 정치적 위기는 2005년 말부터 전개된 반 탁실행동(anti-Taksin movement)이 발단이 되었으며, 특히 2006년 1월부터 탁실행 총리 일가의 주식 매각을 통한 편법적 세금탈루 의혹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탁실행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본격화되었다.<sup>6)</sup>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압력에 굴복하여 의회 해산 이후 실시된 4월 조기선거는 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 500석 중 460석을 획득한 태국애국당이 승리하였으나, 34.8%의 기권표와 12.8%에 해당하는 무효투표가 발생하여 탁실행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임이 확인된 셈이었다.<sup>7)</sup> 국왕 면담 직후 탁실행 총리의 사임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선거부정 등을 이유로 4월 선거 결과의 무효를 판결하였으며, 그 결과 5월 23일에는 탁실행이 총리직에 복귀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이 가속화되었다. 탁실행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가두시위와 집회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마침내 2006년 9월 19일에는 쏘티(Sonthi Boonyaratglin) 장군이 주도하는 군부쿠데타가 재발하여 태국 정치는 ‘쿠데타의 악순환’을 경험하며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한 가지 의문점은 9월 19일 발생한 군부쿠데타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반응이 이전의 군부쿠데타 당시와 비교하여 매우 이례적이었

6) 2006년 2월 들어 쏘티(Sonthi Limthongkhul) 등이 이끄는 반 탁실행 세력은 방콕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들과 탁실행 정부에 불만을 가진 언론, 지식인, 중산층 등을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연대’(PAD: 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를 결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7) 4월 2일 선거결과는 전체 등록 유권자수 45,663,089명 중 29,791,294명이 투표하여 65.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12.8%인 3,815,870표가 기권으로 표시되어 무효투표가 되었고, 25,975,424표만 유효투표수로 계산되었다. 특히 주요 야당들의 선거 불참으로 인해 태국애국당은 전체 400개 선거구 중 278개 선거구에서 단독 후보를 출마시켰으며, 단독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총 유효투표수의 20% 이상 득표율을 확보해야 당선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선거구에 대해 4월 23일 재선거가 결정되었다.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2006.11.09).

다는 사실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 동안 지속되어 온 반 탁썬운동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탁썬 총리를 몰아낸 군부쿠데타를 지지하였으며, 방콕의 일부 시민들은 방콕 도심에 주둔하고 있던 쿠데타 군인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다(BP 2006/09/24). 실질적으로 군부쿠데타가 발생한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4%가 군부쿠데타를 지지하는 것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는데,<sup>8)</sup> 이것은 과거 ‘선’(善)과 ‘악’(惡)으로 특징지어지던 태국의 민군관계에 있어서 군부쿠데타를 ‘악’으로 규정하던 전통적인 관념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Surachart 2001: 77). 비록 수도 방콕과 북부 치앙마이(Chiang Mai) 일각에서 군부쿠데타 반대와 탁썬의 복귀를 주장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전개되기도 하였으나(The Nation 2006/09/23, 2006/10/15), 군부는 커다란 국민적 저항 없이 정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sup>9)</sup>

## V. 한국과 태국의 비교론적 함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퇴보 사 이에서

한국과 태국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경

8) 2006년 9월 20일 발표된 쉐언두셋 대학교(University of Suan Dusit Rajabhat)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019명 중 83.98%가 군부쿠데타를 지지하였으며, 응답자의 75.04%가 태국 정치의 현재 상황을 군부쿠데타가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단지 5%만이 쿠데타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Http://dusitpoll.dusit.ac.th/2549/2549\\_050.html](http://dusitpoll.dusit.ac.th/2549/2549_050.html) (검색일: 2006.12.30).

9) 쿠데타 직후 군부는 헌법 정지와 의회 해산을 명령하고, 국왕을 알현하여 쿠데타 사실을 사후적으로 승인 받은 이후 쏘티 장군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개혁위원회’(CDRM: Council for Democratic Reform under Constitutional Monarchy)를 결성하여 내각을 접수하였다. 군부는 이후 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안보위원회’(CNS: Council for National Security)로 개정하고, 전직 육군사령관과 국왕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 위원을 지낸 쉐라웃(Surayud Chulanont)을 과도내각의 총리로 내세워 정국 안정을 도모하였다(BP 2006/09/29).

험한 크고 작은 정치적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은 비교론적인 차원에서 많은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비록 한국과 태국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구조나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격차 등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인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이행되고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정치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정치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양식의 차이는 결국 서로 다른 정치적 결과를 표출하였다. 강력한 정치권력과 정권교체의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와 의회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국민적 분열과 더불어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통해 정치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정권교체의 유연성을 장점으로 하는 태국의 의원내각제 하에서 탁썬 총리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국민적 저항은 합법적 정권교체가 아닌 군부쿠데타가 발생함으로써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화 이후 새롭게 출범한 민주주의가 하나의 정치체제로서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고 정착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수준의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정치지도자와 국민들, 즉 정치리더십과 시민사회가 어떤 양식으로 대응하고 극복하는가는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공고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 정치리더십 차원에서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가장 주요한 요인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는 정치지도자들의 비민주적 관행과 정치리더십 부재, 그리고 정책적 무능이다. 이른바 권위주의 시기의 ‘제왕적’ 통치행태는 민주화 이후의 정치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표출되어 하나의 관행처럼 지속되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과 태국은 집권 여당이 의회 내에서 다수를 형성하지 못한 채 ‘여소야대’ 정국을 형성하였으나, 집권에 성공한 대다수 지도자들은 야당

과 반대세력에 대해 ‘중재와 조정,’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보다는 과거 야당을 무시했던 ‘명령과 통제’의 일방적 리더십을 표출함으로써 여야 간 충돌과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였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야당과 대립 각을 세우며 일방적인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민주적 리더십을 수립하는데 실패하였으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외형상 ‘탈권위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그의 특유한 저돌적 언행과 일련의 말실수, 국회의 야당을 무시하고 자극하는 ‘편 가르기’ 식의 정책 추진으로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탄핵을 초래하였다.<sup>10)</sup> 태국 또한 집권을 위한 정당연립과 이합집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지도자들의 무능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탁싨 총리의 경우 2001년 선거 이래 의회 내에서 다수를 점유한 상태에서 야당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치행태를 강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논쟁과 더불어 군부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정치리더십 차원에서 민주화 이후 정치리더십의 약화와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또 다른 요인은 정치지도자들의 부패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한국과 태국에서 부패 문제는 단순히 민주화 이후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체제 시기부터 뿌리 깊게 내재되어 온 구시대의 정치적 악습이다.<sup>11)</sup> 이들 두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민주화 이후 선거

10) 대통령 탄핵 당시 야당들이 제기한 탄핵의 주된 이유는 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공개적 지지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②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이 연루된 부패 의혹, ③ 집권 1년 간 경제위기에 준하는 경제정책의 실패 등이 탄핵 사유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탄핵의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야당을 적으로 간주한 대통령의 과도한 언술과 일련의 ‘말실수’가 선거 시기에 즈음하여 야당을 자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1) 한국과 태국은 민주화 이후에도 부패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지수(CI: Corruption Index)를 살펴보면, 2006년 현재 한국은 5.1점으로 세계 163개국 중 4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은 3.6점으로 63위를 차지하고 있다. <http://www.transparency.org> (검색일: 2008.01.19).

를 통한 정치적 경쟁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정치인들의 부패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이것은 정치지도자나 엘리트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부패 척결을 주장하며 새롭게 집권한 역대 대통령마다 측근과 인척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정치리더십의 약화가 초래되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던 노무현 대통령마저 집권 말기에 밝혀진 측근들의 비리 의혹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태국의 경우에도 민주화 이후 역대 총리들이 부패 문제에 연루되어 정치적 퇴진을 맞게 되었으며, 특히 탁싸 총리의 경우 일가의 주식 매각을 통한 편법적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비판과 퇴진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sup>12)</sup>

정치리더십 차원에서 한국과 태국이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군부의 정치적 퇴진이다. 한국의 경우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쿠데타로부터 1979년 군사반란과 1980년 광주사태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군부통치를 경험하였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군부의 정치적 퇴진이 단행되었다. 특히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 등 정치군인들의 인맥을 척결하고, 1979년 군사반란과 1980년 광주사태의 주범인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관을 통해 처벌을 받음으로써 군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신장되었다. 반면 태국은 1932년 궁정쿠데타를 통해 입헌주의가 채택된 이래 ‘태국 정치의 악순환’(vicious of Thai politic)으로 불리는 연이은 군부쿠데타를 경험하였으며(Chai-anan 1982: 1-2), 이를 통해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다(Chai-anan 1981; Suchit 1988). 1992년 민주화 이후 태국은 비록 외형적으로나마 군부

12) Charas Suwanmala 면담 (면담일: 2007/10/18).

의 정치적 퇴진이 이루어졌으나(Surachart 1998, 2000, 2001; Eom et al. 2005), 정치·경제적으로 군부의 인맥과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시금 또 다른 군부쿠데타를 경험하게 되었다(박은홍 2007).

한국과 태국에 있어서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는 정치 리더십과 정치구조의 또 다른 차이점은 대안세력의 존재 여부이다. 한국과 태국은 공통적으로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정치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특정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정당의 분열과 이합집산이 지속되는 등 정당정치의 허약성이 민주주의 공고화를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정용대 1996; Suchit 1996: 90; Anusorn 1998). 이러한 정당정치의 허약성은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집권세력을 대체할 대안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과거 집권당으로서 통치 경험을 지닌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세력들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함으로써 탄핵에 따른 권력 공백과 정치적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존재하였다. 반면 태국의 경우 2006년 4월 조기선거가 실시될 당시까지 야당이 대안세력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제시하지 못하고 선거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가속화시켰다. 물론 민주당과 같은 야당세력은 탁싨 총리와 태국 애국당 정부의 비민주성과 부패 문제를 비판하며 자신들이 대안세력임을 자부하였으나, 이들 또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13)</sup>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과 태도 또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시민사회의 정치적 태도나 정치문화는 국가 간 경제적 격차나 교육 수준 등의 비교를 통해 또 다른 분석과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정치

13) Ukrist Pathmanand 면담 (면담일: 2007/10/18).

적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반응이야말로 정치적 위기의 대응과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민주화 이후 새롭게 형성된 민주적 법·질서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가운데 법·질서를 무시한 일부 이익단체나 시민단체들의 과도한 정치적 의사 표출은 정치적 혼란과 위기 상황을 유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무관심과 미성숙은 민주주의의 퇴보나 권위주의체제로의 회귀를 방지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공 이후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급격하게 성장하여 과거 권위주의체제 시기의 정치적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참여와 경쟁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정치문화가 보편적인 정치질서로 자리 잡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sup>14)</sup> 반면 태국의 시민사회는 비록 1992년 민주화 이후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는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군부쿠데타를 용인함으로써 한국과 다른 정치적 결과를 유도하였다.<sup>15)</sup>

시민사회 영역에서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필수요건은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와 시민의식이다. 2004년 대통령 탄핵사태가 발생하였을 당시 한국의 시민사회는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렸다. 비록 일부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들은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가두시위와 집회를 벌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판결되기 이전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국 국민들은 투표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활성화된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엘리트 중심의 조직구조, 떼쓰기 식의 과도한 정치적 요구, 폭력을 동반한 불법적 시위문화 등을 개선하지 못한 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중앙일보 2006/06/29).

15) Suchit Bunbongkarn (면담일: 2007/11/24).



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다 성숙한 정치문화를 보여주었다. 반면 2006년 초부터 격화된 태국 시민사회의 반 탁실행동은 4월 조기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주요 야당의 선거 불참과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결과는 그 자체가 무효화됨으로써 더 큰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또한 9월 19일 발생한 군부쿠데타를 지지하는 태국 국민들의 반응 또한 민주적 정치의식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물론 집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부패 문제를 야기한 탁실행동 리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의 퇴진은 선거나 다른 합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군부쿠데타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윤진표 2007: 61; 이동운 2007b: 191-2).

결국 민주화가 추진된 국가들에서 민주화 이후 정치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정치적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 국가들의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정치권력이나 민주적 정치모델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정치리더십 차원에서 의회나 야당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나 과거 악습인 권위주의적 통치행태, 그리고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부재와 무능 등은 시민사회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치지도자가 연루된 부패 문제 또한 정치리더십의 약화와 위기를 촉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지도자의 무능이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견제와 저항을 전개하는 시민사회의 정치운동 역시 민주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될 때 그 위기 상황이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었으며, 민주적 ‘게임의 법칙’을 무시한 과도한 정치개입이나 다른 물리적 방법의 모색은 결국 또 다른 정치변동을 초래하게 되었다.

## VI. 맺음말

1987년과 1992년에 각각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과 태국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이행과정에서 거시적으로 유사한 경로를 거쳐 헌법과 선거법, 정당법 등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된 민주주의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두 국가는 모두 과거 권위주의 시기의 정치적 관행과 정치리더십 부재, 그리고 정치적 무능 등 정치리더십의 문제점이 표출됨으로써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반발 및 저항을 촉발하였으며, 정치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위기를 초래하였다. 정치리더십 차원에서 한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과 야당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언행이 정치리더십의 약화와 더불어 야당에 의한 탄핵사태로 발전하여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태국은 탁싨 총리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부패 문제가 시민사회의 도전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군부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위기의 발미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치리더십의 구조적 차이점과 양국 시민사회의 정치적 태도 및 정향 등은 위기의 진행경로와 대응과정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결과를 유발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이행되고 안정적으로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와 사회문화, 경제 수준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공고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정치과정에서 활동하는 주요 정치행위자인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가 민주화 이후 당면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민주적 법과 질서를 지켜내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정치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새롭게 형성된 민주주의체제 내에서 새로운

법과 질서에 합당한 민주적 정치모델을 정립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즉, 민주주의 공고화 차원에서 단순히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 모두가 민주주의 이행과정을 통해 합의된 민주적 법·질서를 유일한 ‘게임의 법칙’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그들의 정치생활 속에 내면화하고 축적하는 작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위기의 주요 원인과 대응과정을 한국과 태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정치적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그 정치적 결과가 지니는 비교론적 함의를 선형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의 원인과 대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리더십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태도, 정치적 정향 등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연구결과의 한계를 지닌다. 한국과 태국의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와 대응과정, 그리고 그 정치적 결과를 비교하여 그것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요인들 이외에도 다른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정치적 위기, 정치적 대응, 민주주의 공고화, 정치리더십, 시민사회, 한국, 태국

## 참고문헌

- 김의영. 2004. “국회와 시민사회.” 박찬욱·김병국·장훈 편.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 pp. 173-216.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김호진. 2006. 『대통령과 리더십』. 서울: 청림출판.
- 박은홍. 2007. “타이 민주주의의 전환: 과두정치로서의 ‘포폴리즘’의 진화.”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2: 129-52.
- 윤진표. “탁신 태국 총리의 정치리더십: 특징과 공과.” 박사명 외. 『위기극복의 정치리더십: 동남아 4개국 정치지도자 비교연구』. pp. 55-94. 서울: 이매진.
- 이동윤. 2007a. “국회의 입법과정과 시민단체의 역할: 참여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6(1): 165-92.
- \_\_\_\_\_. 2007b. “민주주의 공고화와 퇴보 사이에서: 태국의 탁싌 정부와 민주주의 논쟁.” 『국제정치논총』 47(2): 173-96.
- 『조선일보』 2004/03/12; 2004/10/31.
- 정용대. 1996.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윤정석·신명순·심지연 편. 『한국정당정치론』. pp. 509-27. 서울: 법문사.
- 정윤재. 2003. 『정치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서울: 나남. 『중앙일보』 2006/06/29.
- 함성득. 2002. “한국 대통령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 명령자에서 조정자로.” 『행정논총』 40(3): 97-121.
- Chai-anan Samudananijja. 1981. *Kan-luektang phak-kanmueng ratasapha lae kbanatbaban* (선거, 정당, 의회, 그리고 군부). Krungthep: Samnakphip Bankit.
- Surachart Bamrungsuk. 1998. *Thaban kab prachatipatai thai: chak 14 tula su pajchuban lae anakbot* (태국의 군부와 민주주의: 1973년 10월 14

- 일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Krungthep: Samnakhip Tontamrab
- \_\_\_\_\_. 2000. *Thaban kab kanmuang thai nai satawan-na: Phathanakan lae khwam-plyangplaeng* (다음 세기의 군부와 태국 정치: 발전과 변화). Krungthep: Samnakhip Chulalongkorn mahawithayalai.
- Anusorn Limmanee. 1998. "Thailand." In Wolfgang Sachsenrder and Ulrike E. Frings (eds.). *Political Party System and Democratic Development in East and Southeast Asia*, Vol. II: Southeast Asia. pp. 403-447. Brookfield: Ashgate.
- Armony, Ariel C. and Hector E. Schamis. 2005. "Babel in Democratization Studies." *Journal of Democracy* 16(4): 113-28.
- Baker, Bruce. 2001. "Quality Assessment of Democracy in the Third World." In Jeff Haynes (ed.). *Democracy and Political Change in the 'Third World.'* pp. 21-34.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ngkok Post (BP)* 2006/09/24; 2006/09/29.
- Blais, Andr and Stphane Dion. 1990. "Electoral Systems and the Consolidation of New Democracies." In Diane Ethier (ed.).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in Southern Europe, Latin America and Southeast Asia*. pp. 250-68. London: Macmillan Press.
- Carothers, T. 2002.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13(1): 5-21.
- Chai-anan. Samudananija. 1982. *The Thai Young Turk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Chookiat Panaspornprasit. 2004. "Thailand: Politicized Thaksinization." *Southeast Asian Affairs 2004*. pp. 257-66.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Dahl, Robert A.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Diamond, Larry. 1996. "Is the Third Wave Over?" *Journal of Democracy* 7(3): 20-37.
- \_\_\_\_\_. 1997. "Introduction: In Search of Consolidation." In Larry Diamond, Marc F. Plattner, Yun-han Chu, and Hung-mao Tien (eds.). *Consolidating the Third Wave Democracies*. pp. xiii-xlvii.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ngberg, Jan and Svante Ersson. 2001. "Illiberal Democracy in the 'Third World': An Empirical Enquiry." In Haynes (ed.). pp. 35-54.
- Eom, Kihong and Dong-Yoon Lee. 2005. "Thailand." In Karl DeRouen, Jr. and Uk Heo (eds.). *Defense and Security: A Compendium of National Armed Forces and Security Policies*, Vol. 2. pp. 819-33. Santa Barbara, CA and Oxford, UK: ABC-Clio.
- Freedom House. <http://www.freedomhouse.org> (검색일: 2007.04.06).
- Hahm, Chaihark and Sung Ho Kim. 2005. "Constitutionalism on Trial in South Korea." *Journal of Democracy* 16(2): 28-42.
- Haynes, Jeff. 2001. "Introduction: The 'Third World' and the Third Wave of Democracy." In Haynes (ed.). pp. 1-20.
- [http://dusitpoll.dusit.ac.th/2549/2549\\_050.html](http://dusitpoll.dusit.ac.th/2549/2549_050.html) (검색일: 2006.12.30).
-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2006.11.09).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_\_\_\_\_. 1996. "Democracy for the Long Haul." *Journal of Democracy* 7(2): 3-13.
- Kim, Uichol. 2002. "Democracy, Leadership and Political Culture in Korea: With Specific Focus on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8(2): 137-70.
- Korten, David C. 1972. "Task: Situational Determinants of Leadership

- Structure.” In Glenn D. Paige (ed.). *Political Leadership: Readings for an Emerging Field*. pp. 146-64. New York: The Free Press.
-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1996. “Toward Consolidated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7(2): 14-33.
- Macedo, Stephen. 2000. “Transitions to What? The Social Foundations of the Democratic Citizenship.” In James F. Hollifield and Calvin Jillson (eds.). *Pathways to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pp. 53-70.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McCargo, Duncan and Ukrist Pathmanand. 2005. *The Thaksinization of Thailand*. Copenhagen: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 Pasuk Phongpaichit and Sungsidh Piriyarangsarn. 1994. *Corruption and Democracy in Thailand*. Chiang Mai: Silkworm Books.
- Pye, Lucian W. 2000. “Democracy and Its Enemies.” In Hollifield and Jillson (eds.). pp. 21-36.
- Schedler, Andreas. 1998. “What is Democratic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9(2): 91-107.
- Schmitter, Philippe C. and Terry Lynn Karl. 1993. “What Democracy Is ... and Is Not.” In Larry Diamond and Marc F. Plattner (eds.). *The Global Resurgence of Democracy*. pp. 39-52.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higetomi, Shinichi. 2002. “Thailand: A Crossing of Critical Paralleled Relationships.” In Shinichi Shigetomi (ed.). *The State and NGOs: Perspective from Asia*. pp. 125-44.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ørensen, Georg. 1993.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Processes and Prospects in a Changing World*. Boulder and Oxford: Westview Press.

- Suchit Bunbongkarn. 1988. "The Military and Development for National Security in Thailand." In J. Soedjiati Djwabdono and Yong Mun Cheong (eds.), *Soldiers and Stability in Southeast Asia*. pp. 133-62.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_\_\_\_\_. 1996. *State of the Nation: Thailan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urachart Bamrungsuk. 2001. "Thailand: Military Professionalism at the Crossroads." In Muthiah Alagappa (ed.), *Military Professionalism in Asia: Conceptu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pp. 77-91. Hawaii: East-West Center.
- The Nation* 2006/09/23; 2006/10/15.
- Thitinan Pongsudhirak. 2003. "Thailand: Democratic Authoritarianism." *Southeast Asian Affairs* 2003. pp. 277-90.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 (검색일: 2008.01.19).
- Zakaria, Fareed. 1997.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76(6): 22-43.
- \_\_\_\_\_. 2003.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W. W. Norton & Co.

#### 면담 자료

- Charas Suwanmala. 쉐라롱껀대학교 정치학부 교수 (면담일: 2007/10/18).
- Suchit Bunbongkarn. 쉐라롱껀대학교 정치학부 석좌교수 (면담일: 2007/11/24).
- Ukrist Pathmanand. 쉐라롱껀대학교 정치학부 교수 (면담일: 2007/10/18).

(2007. 11. 15 투고; 2008. 2. 11 심사; 2008. 4. 15 게재확정)



Abstract

## Political Crisis and Response after Democratization: Comparative Implications of South Korea and Thailand

Dong-Yoon Lee (Professor, Silla University)  
and Jaehyon Lee (Post-Doc. Fellow,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political crisis in South Korea and Thailand on the way to democratic consolidation after democratization. Comparing the causes and the processes of the political crisis in the countri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re identified and analyzed. For this, the authors adopted two variables; political leadership and civil society. Generally speaking, democratic consolidation means having substantive democracy on top of procedural democracy that focuses on electoral democracy. Substantive democracy is achieved when political leaders and civil society internalize democratic norm and order as their political attitude and orientation. South Korea and Thailand, democratized in 1987 and 1992 respectively, implemented political reform inclu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changes of election and political party laws. In addition, both countries held regular and competitive elections which completes procedural democracy. Procedural democracy, however, is not enough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In both countries, political leadership that was not free from authoritarian behavior, political inefficiency, and corruption faced grave political challenges.

In civil society as well, unreasonable demands and resistance that tested democratic law and order, political apathy and absence of democratic civil mind invited political instability and crisis. Particularly, 2004 presidential impeachment in Korea and 2006 military coup in Thailand were important occasions to test the ability of political leadership and civil society to cope with political crisis. Consolidating new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needs more than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democracy. Both political leadership and civil society are required to accept agreed democratic law and order as the sole 'rule of game' and to internalize democratic attitude in substantive way.

Key Words: Political Crisis, Political Response, Democratic Consolidation, Political Leadership, Civil Society, South Korea, Thailand